

1991년 11월 27일 제122회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일시: 1991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2분 개의

○ 발언자:

- 오가타 가쓰요(緒方克陽)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운수정무차관)
- 이노우에 유키히코(井上幸彦) 정부위원(경찰관료, 경시청 경비부장, 경찰청 장관관방장, 경찰청 경무국장, 경찰청 차관, 경시총감)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대장성 관료, 정치가,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 경제기획청 장관, 중의원 의원,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내각관방 장관, 부총리, 대장대신, 우정대신,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자민당 총무회장, 자민당 총재)
- 곤도 데쓰오(近藤鐵雄) 국무대신(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 노동대신, 경제기획청장관 등)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정부위원(외교관, 외무성 아시아국장,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장, 주 인도 대사, 주 중국 대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204306X00819911127&spkNum=89¤t=24>

○ 해제(개요 및 특징)

오가타 의원은 먼저 조선인 종군위안부에 관한 구체적 숫자가 기록된 『특고월보』의 존재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위원은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 미야자와 총리는 전임 가이후 총리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종군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있음. 정부위원은 한국 정대협의 요구사항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침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어반복으로만 일관하는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오카다 의원이 분노를 표시함.

○ 주요 내용 번역

- ▷ **오가타 위원** “(전략) 우리 당의 의원이 참의원에서 다룬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실은 올해 4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모토오카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保安課)라는 데서 ‘극비(極秘)’라고 붉은 글자로 쓰인 것인데요. 『특고월보』 복제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선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든가,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가, 더 나아가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유효성을 둘러싸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국가공안위원장은 국립국회도서관에 조사를 지시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이노우에 정부위원**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고월보』 복제판은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토오카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확인해본 바, 국립공문서관에는 원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제판, 국립국회도서관에 있는 것과 같은 복제판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 ▷ **오가타 위원** “(전략)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지난번 참의원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고, 가이후 총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를 들어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 명부 문제 혹은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제공할 것은 제공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이후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고 하셨는데, 과거의 이와 같은, 한국을 시작으로 명부 제공을 포함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여러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총리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략)

-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조선인 피징용자의 명부는 노동성이 중심이 되어 올해 3월에 9만 명분의 명부를 한국정부에 인도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각종 정보의 파악에 힘써, 성실히 조사를 계속하며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방금 국가공안위원장이 답변드린 대로 예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만,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 **오가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 두 가지만 물을 생각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의 여성단체연합회 등이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개서한을 가이후 총리에게 제출했는데, 정부로서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요구도 있어 4월 24일에 일단 주한 일본대사관이 상대방에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대문제협의회는 올해 5월에 이 설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며 재차 정식 회답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개서한을 냈는데, 그 내용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신을 하는 것이 일본국(日本国)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곤도 국무대신** “지적하신 조선인 **중군위안부** 문제는 노동성 관계에서 조사해보았으나 아무것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당시 후생성 근로국이나 국민근로동원서에 근무했던 사람들로부터 사정을 들어보았는데, 당시 후생성 근로국도, 국민근로동원서도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자정신대**와의 관련 유무를 포함해서 그 경위 등에 관해서는 전혀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오가타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재차 회답을 요청받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 ▷ **다니노 정부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여러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일단 현재 상황 및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몇몇 요청에 대한 우리 측의 회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서한의 형태로 재차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워낙 긴 내용이니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조사의 경로를 한정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선인 **여자정신대**의 존재,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 일본 정부는 그 전체상에 대해 책임지고 밝히고 사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어있지 않은가. 보상하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바르게 명기해 달라. 이런 여러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으로는, 조금 전에도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 조사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만일 나온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오가타 위원**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를 느낍니다.”